

## 고용창출, 기본에 충실해야

남재량\*

고용창출, 정책당국의 최대 화두이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들의 핵심 관심사이기도 하다. 고용은 그 자체로서 뿐 아니라 복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더욱 중요하다. 고용을 도외시하는 복지는 지속되기 어렵다. 이미 국내외 여러 정부들은 고용의 이러한 역할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들을 펴왔다. 성공적인 경우들도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더 많다. 고용률 70% 달성을 핵심으로 하는 박근혜 정부에서 고용창출 여부는 정권과 명운을 함께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체제에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기업이다. 그런데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주체이지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들에게 고용창출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 당장은 그러한 요구에 응하는 모습을 보일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고용창출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요구는 자본주의의 작동 메커니즘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고용창출은 노동에 대한 수요가 노동공급과 어우러져 이루어진다. 이러한 수급 메커니즘을 방해하는 요인이 없다면 경제주체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수급 메커니즘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현실 경제에서 가득하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경직성이다. 근로자들은 고용의 감소, 즉 자신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며, 자신이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일하고 싶어 한다. 이로 인해 고용조정에 하방 경직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고용조정이 어려울 경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각 경제주체들의 수많은 사연들은 임금이라는 가격변수를 통해 조정될 수밖에 없다. 임금이 신축적으로 움직인다면, 고용조정의 어려움에 따른 비용의 상당부분을 흡수할 수 있다. 그러나 임금마저도 경직적이라면 노동시장에서 불일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비용은 또 다른 형태로 다른 경제주체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현실, 특히 대기업 실정에 가깝다.

---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장(jmam@kdi.re.kr).

이러한 상황에서 임금구조와 임금체계에 대한 논의가 최근 들어 통상임금이라는 형식을 빌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나, 문제의 핵심은 역시 대기업이다. 모쪼록 슬기를 모아 단순하고 투명하며 유연한 임금체계를 확보하여 고용안정성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임금경직성 완화는 고용창출을 지속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이며 토양이다.

그러나 이러한 토양을 마련하는 데에서 그치기에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복잡하다. 다양하고 복잡한 현실의 문제들이 시장에 잘 녹아들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들을 정비하여야 한다. 보다 다양한 형태의 근로가 안정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에서도 미비한 사항들을 전향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기본에 충실하면서 현실적인 제약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야말로 고용창출의 핵심이다. **KLI**